

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

- 2015년도 환경부 업무보고 -

□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의 최우선 해결

- (미세먼지)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확대, 고농도 발생 시 차량 부제운행 등 대응 강화
- (녹조) 작은 하천부터 시작하는 “윗물살리기” 본격화
- (유해물질) 소독·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(15종) 안전·표시제 시행
- (악취) 폐기물 운반차량 현대화, 도심 하수도 악취개선 본격 추진

□ 환경불편을 덜어주는 ‘찾아가는 환경서비스’ 본격 시동

- (무상방문수거) 중소 폐가전·가구류와 도서지역까지 서비스 확대
- (단독주택 분리배출) ‘재활용 동네마당’ 시작으로 거점수거 활성화
- (폐수찌꺼기) 자금지원과 건설탕으로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
- (어린이 활동공간) 실내환경 무료진단 2배 확대(15,000개소)
- (학교 실내환경) 석면·라돈 진단 및 개선조치 시행(2,600학교)
- (충간소음) ‘이웃사이 서비스(현장방문, 측정·상담)’ 확대(5,000가구)
- (지진경보) 2분이었던 최초 경보 발령시간, 50초로 줄임

□ 환경가치를 높여 새로운 산업육성 기회로 창출

-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, 유엔 제출
- 해외 신흥환경시장 진출지원,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, 유용 생물자원 발굴 등으로 환경시장 개척 본격 착수
- 20~30년이 지난 환경오염 발생시설 제한지역의 실효성 검토

□ 환경부(장관 윤성규)는 1월 22일 오전 10시, 관계부처 합동으로 **2015년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**을 대통령께 보고했다.

-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‘**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**’을 만들고, ‘**환경으로부터 미래가치를 창출**’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.

□ **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.**

-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('12, 5회 → '14, 23회)하는 등 국민 우려가 높은 여건을 고려하여 **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.**

*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정체추세 : ('09) 51 → ('13) 44 → ('14) 44 $\mu\text{g}/\text{m}^3$ ↔ WHO 권고기준 20 $\mu\text{g}/\text{m}^3$

- 현재 시범예보 중인 **초미세먼지(PM_{2.5})**를 **본예보로 전환**하고, 작년 부터 시행 중인 **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여***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.

*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목표('14→'15년): 83 → 85%, 초미세먼지 79→80%

- 전국단위에서 **미세먼지 경보제**를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하고, 고농도(PM₁₀ 120, PM_{2.5} 65 $\mu\text{g}/\text{m}^3$ 이상)시에는 **차량 부제운행, 도로 물청소** 등의 대응조치(지자체 협업)를 시행하고,
- 자동차·사업장에서의 **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**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*를 강화한다.

* (자동차)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및 노후 휘발유차 촉매장치 교체 등 지원(54천대)
(사업장)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포함추진,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확대·시행

- 녹조를 유발하는 **오염물질의 분류 유입을 줄이기** 위한 **천변저류지 조성, 지류총량제 시범시행** 등 “**윗물 살리기**”를 추진한다.

- 또한, 수상활동 안전여부를 알려주는 **친수경보제**를 새롭게 도입하고, 전국 124만 명의 국민에게 고도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.(전국 20개소, 824억원 투입)

- 방충제, 섬유유연제 등 **15종의 생활화학제품**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에 대해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**안전·표시 기준을 마련·시행**(‘15.4)하고,
 - 화학사고시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**장의 영향평가제** 및 **위해관리계획**을 대형사업장(290개소) 대상으로 우선 시행(‘15.1)한다.
- 하수도, 쓰레기 운반차량 등 **생활속 악취 발생원**에 대해 각각 구도심 **악취개선 시범사업**(은평구, 종로구)과 **폐기물 차량 현대화**(밀폐화)를 추진(수도권 104대 시범도입)하며,
 - **정화조**에 대해서도 **공기공급 장치**(악취저감 시설) **의무설치** 대상을 확대(1,000인조→200인조, 하수도법 개정)할 계획이다.

□ **국민들의 환경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.**

- 작년 수거실적 2.4배 증가, 국민 만족도 99.7%로 호평을 받았던 ‘**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**’를 대형 뿐 아니라 **중형**(선풍기, 청소기 등) **제품까지 확대**하여, 국민편의를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한다.
 - 또한, **단독주택·농어촌**을 중심으로 “**재활용 동네마당**”을 시범 설치(2개 권역 109개소)하여 분리배출 수거를 활성화하고,
 - 2016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**산업폐수·폐수찌꺼기**를 전면 **육상처리**하기 위하여 소각·탈수 등 처리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,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육상처리를 활성화하여 올해 12월까지 **해양배출 제로화**를 달성할 계획이다.
- 전국 1만 5,000개소 **어린이집, 유치원, 놀이터**에 대해 중금속, 석면, 기생충알 등 **환경안전진단**을 확대하고, **학교내 석면**(전국 **2,248개교**), **라돈**(**371개교**)에 대해서도 실태조사·개선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.

- **충간소음 분쟁현장**을 찾아 상담·측정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“**이웃사이서비스**”를 늘리고(5,000가구), **지진경보 발령 소요시간**을 현행 2분에서 **50초 이내로 단축**한다.

□ **환경가치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새로운 기회를 적극 창출**해 나간다.

- **시장친화적 접근**을 통해 **온실가스 감축**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, **친환경 소비**의 저변을 확대한다.

- 산업계 영향 등 국내실정,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에 부합하도록 **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(INDC)**를 설정하여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,

* EU·미국 등 선진국은 '15.3월까지, 중국·멕시코 등은 늦어도 6월경 제출 예정

- 사업장 **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(상쇄)**를 운영,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게 감축 유연성을 부여하고, 중소기업 **맞춤형 지원**과 소통을 **강화**하여 제도의 **조기 안정화**를 도모한다.

* 온실가스 감축설비 금융지원, 중소기업 교육과정, 산업계·전문가 협의체 정례화 등

- 본격적인 **저탄소차**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**보급 규모를 대폭 늘리고*** 민간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. 아울러 고속도로, 주요도시에 **공공충전 인프라**를 **확충**하여 **전국 운행기반**을 마련할 계획이다.

* 전기차(3,000대, 대당 1,500만원 지원), 하이브리드차(30,000대, 대당 100만원 지원)

- 급성장중인 **중국 환경시장***에 대한 **진출**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한·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**공동시범사업****을 **본격 추진**하여 **우수 환경산업 진출**의 기반을 마련하고,

* 중국은 “스모그와의 전쟁”을 선포하고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304조원의 환경투자 발표

** 중국 3~5개 제철소의 대기오염저감설비 설치사업(韓 200억원 등 총 2,000억원)

- 반도체 시장의 1.7배나 되는 세계 물산업 시장(13 5,568억 달러)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‘물산업 클러스터’(대구, 3,519억원)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한다.
- 국립공원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새로운 유형과 지역을 발굴하고, 생태계 보호지역을 국제사회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며, 지역별 차별화된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지원·육성하여 지역 경제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.
- 치료제, 발효제, 환경정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 자생생물 발굴사업에 본격 착수(15, 4개 분야)하여 제약, 식품 등 관련업계의 생물자원 시장(3,300억 달러, OECD)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.
-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,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(1.7조원)하고,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“친환경에너지타운”을 조기 준공(홍천, '16.9→'15.12)하며 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.
- 저비용, 고효율의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하고,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도 살고 기업도 웃도록 한다.
- 최대 9종에 이르는 환경 인허가를 통합·간소화하고, 허가내용의 주기적 재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하는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,
-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발전, 국민인식 변화 등 환경여건의 변화에 맞춰 20~30년된 제한지역에 대한 실효성을 재점검할 계획이다.
-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“환경은 국민행복과 삶의 질의 원천”이라 강조하고 “실사구시(實事求是)의 환경정책으로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붙임 1. 2015년 환경부 업무계획.
2. 주요정책 인포그래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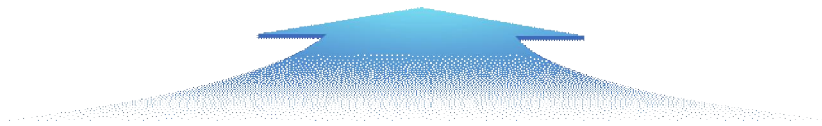
2015년 환경부 업무계획(서면)

1

기본방향 및 목적

① 비전 및 주요과제

고품위 환경복지 구현



1.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

- ① 생활 환경문제의 최우선적 해결
- ② 찾아가는 환경서비스 확대
- ③ 저비용·고효율 환경관리로의 전환

2.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

- ①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
- ② 새로운 환경가치 창출
- ③ 환경과 기업, 모두 웃는 환경규제 개혁

② 정책개요

□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 영위

- 물, 공기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, 생물다양성이 잘 보전된 수려한 생태계 조성

□ 미래세대까지 환경복지를 온전히 누리는 지속가능사회 구현

- 자원·에너지의 순환이용, 저탄소 경제 등 후손들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·경제의 선순환 사회 확립

3 국민행복 성과지표 중간성과

□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

| 지표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
|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수도권(서울) 미세먼지 농도($\mu\text{g}/\text{m}^3$) * 황사일 제외 | 44 | 43 | 42 | 37 |
|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(%) | 71 | 73 | 76 | 80 |
|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(천개소, 누계) | 12 | 27 | 29 | 30 |
| 위해성 확인 생활화학용품 (개, 누계) | 121 | 161 | 205 | 250 |
| 하천·호소 “좋은물” 달성비율 (총인 기준, %) | 81.1 | 81.6 | 82.5 | 83.3 |

※ 누계는 ‘12년 실적부터 합산하여 집계

□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

| 지표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환경산업 수출액 (억불) | 79 | 86 | 93 | 100 |
| 폐기물에너지화 원유대체 효과 (만배럴, 누계) | 86 | 554 | 1,146 | 1,800 |
| 생태하천 복원길이 (km, 누계) | 1,134 | 1,249 | 1,349 | 1,640 |
| 멸종위기종 복원 (종, 누계) | 36 | 43 | 48 | 54 |
| 자생생물 확보 (건, 누계) | 42,931 | 44,000 | 45,000 | 46,000 |

※ 누계는 ‘12년 실적부터 합산하여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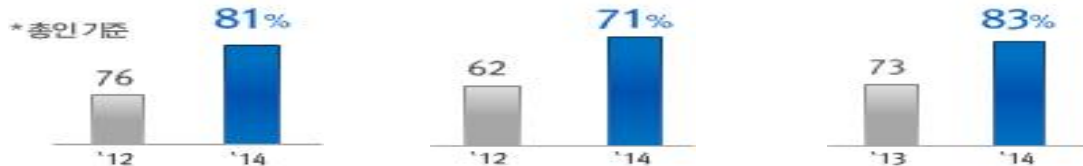
1 성 과

□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

좋은물 달성 비율(하천·호소)

농어촌 상수도 보급률

미세먼지 예보 정확도



□ 화학물질 및 환경피해에 대한 안전망 확충

- * 화학물질 위해 관리체계의 선진화 및 화학사고 예방·대응역량 확충
- *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법제화로 환경안전사회 기틀 마련('14.12)

□ 지속가능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

- * 배출권거래제 시행완비, 제2차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('16~'20) 확정
- * 대형폐가전 수거실적 2.4배 증가, 친환경에너지타운(홍천) 착수

□ 과학적 환경규제 시행으로 18조원에 달하는 기업투자 실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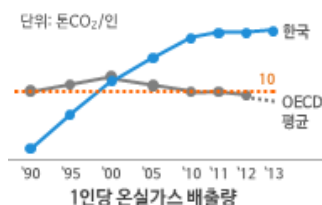
2 한 계

□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달하는 생활환경 서비스

- * 서울 연간 미세먼지 농도는 $44\mu\text{g}/\text{m}^3$ 로 WHO 권고기준($20\mu\text{g}/\text{m}^3$)의 2배를 상회
- * 국민의 68%는 “유해화학물질 유출” 불안 응답('14.11, 통계청 전국 사회조사)

□ 저탄소사회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 필요

- * 미·중 기후변화 공동선언('14.11) 등 국제 사회 기후논의는 ‘행동으로 전환’ 중
- *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GDP성장률 대비 둔화되고 있으나 증가 추세는 여전히 지속



□ 환경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의 낮은 체감도

- * 대한상의 규제개선 체감지수('14.12) : 환경 98 ↔ 전체 평균 121, 건축 113

1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

【1】 생활 환경문제의 최우선적 해결

□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(국정과제 95-3)

- 대기오염 예보 정확도를 향상*시키고, 미세먼지(PM₁₀, PM_{2.5}) 경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
 - 고농도 발생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응조치(자동차 부제운행, 도로청소 등) 강화
 - * 미세먼지(PM₁₀) 83 → 85%, 초미세먼지(PM_{2.5}) 79 → 80%, 오존(O₃) 77 → 80%
-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지원*, 경유택시('15.9 도입) 관리강화**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확대
 - *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및 노후 휘발유차 촉매장치 교체 등 지원(54천대)
 - ** 검사주기 단축(현행 1년→6개월), 배출가스 보증거리 연장(현행 16만→19만km)
-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('15~'24)에 따라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확대*·시행하고,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관리 강화**
 - * 인체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(PM_{2.5}), 오존(O₃)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관리권역(포천, 광주, 안성, 여주) 및 적용대상(현행 1,2종→3종)을 확대 시행
 - **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(NO_x)을 대기배출부과금 대상항목으로 포함추진

□ 녹조 걱정 없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(국정과제 95-2)

- 4대강의 조류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천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천변저류지 조성('15.6) 및 지류총량제* 시범도입 추진('15.8)
 - * 수질오염총량제를 오염이 심한 지류 중심으로 확대하고, 현 대상물질(BOD, TP)외에 지류별 개선이 필요한 오염물질(TN, 중금속 등)을 조사·관리
-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선진화
 - * 면(面)단위 녹조 원격 측정기법, 3차원 녹조 자동 측정시스템
- 조류경보제를 호소 뿐 아니라 하천(4대강 상수원이용구간)으로 확대 시행하고, 수상활동 안전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를 도입
- 독성조류로부터 더욱 안전한 고도정수 처리 수돗물을 전국 124만명에게 신규 공급(전국 20개소, 824억원)

□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공고화(국정과제 88)

○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

- 화학사고시 사업장 밖 피해를 최소화하는 **장외영향평가제** 및 **위해관리계획**을 대형사업장(290개소) 대상으로 우선 시행('15.1)
- **대↔중소기업간 협업공동체***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

* 화학물질관리법상 안전설비 및 관리자 공동 활용, 위해관리계획 공동 고지 등을 수행하며 49개 공동체, 390개 업체에서 참여 중

○ 일상 소비생활에서의 잠재적 위해요소 사전 차단

- 생활화학제품(소독제, 방향제 등 15종)에 함유될 수 있는 **유해성분**에 대해 **안전·표시기준을 마련·시행**('15.4)

○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준비

-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체 구성·운영으로, **환경책임보험 보장금액, 배상책임한도**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

* 하위법령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('15.7~8),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('15.11)

□ 악취 없는 생활환경 조성

○ 구도심지역 하수 악취개선 시범사업(종로구·은평구) 추진('15.3~12)

- **관계기관 공동**(환경부, 서울시, 건기연)으로 합류식 하수관거의 악취 원인 규명, 모니터링, 저감시설의 효과평가 등 **종합적 악취개선 사업 추진**

○ 악취의 주요 발생원인 정화조에 악취저감 시설인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대상 확대(1,000인조→200인조, 하수도법 개정)

※ 지자체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악취 발생 유형별 개선방안을 제시한 하수도 악취관리 매뉴얼 제작·배포('15.7)

○ 악취저감, 폐기물 날림방지, 미관확보 등을 위해 **폐기물 수거차량 선진화**(밀폐화) 시범사업(수도권 104대) 및 **덮개재질 고시** 추진('15.12)

【2】 찾아가는 환경서비스의 확대

□ 구석구석 찾아가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(국정과제 98-2)

-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대형 뿐 아니라 중형(선풍기, 청소기 등)으로 확대, 국민불편 해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도모
 - 도서지역 폐가전 무상수거 정례화, 가구류 무상수거 시범사업 추진
- ‘재활용 동네마당’의 시범설치(2개 권역 109개소, '15) 및 단계적 확대('16)로 ‘문전수거’에서 ‘거점수거’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배출을 생활화
 - * 단독주택·농어촌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분리배출 거점수거시설
- 산업폐수 폐수오니 처리시설에 대한 우선 자금지원 및 순환자원거래소를 활용한 육상처리 촉진으로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(해수부·환경부 협업)

□ 유해물질을 측정·제거하는 실내환경 개선서비스

- 유치원,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금속, 방부제와 같은 유해물질 안전 여부를 측정해 주는 무료 환경안전진단 확대(15,000개소)
-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석면(2,248학교)·라돈(371학교) 관리실태를 조사하고, 주기적 모니터링 등 개선 조치(교육부)
- ‘충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’의 일환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·측정하여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확대('14, 3,000 → '15, 5,000가구)

□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기상 서비스

- 특·정보 문자서비스 대상(호우, 폭염 등 4종)에 한파를 추가하고,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확대(수도권 → 전국)
- 지진정보 발생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

| 종류 구분 | (現) 지진속보·통보 시스템 | (新) 지진조기경보시스템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통보시간 | 속보 120초 이내 통보 180초 이내 | 조기경보 50초 이내 (’20년까지 10초 이내) |
| 지진정보 | 진원시, 진앙, 규모 | 진원시, 진앙, 규모, 예측진도도 |
| 방식 | 최종 분석후 통보 | 1차 최초 관측이후 50초 이내 통보 2차 최종분석 후 상세정보 제공 |

【3】 저비용·고효율 환경관리로의 전환

□ 환경인허가제도 선진화(국정과제 95-1)

- 환경관리 효과는 제고되면서도 분산·중복된 허가를 통합·간소화 하는 법률 제정('15.6)
 - 허가내용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하여 환경질 제고와 함께 환경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

| 구분 \ 종류 | 현행 환경관리방식 | 통합환경관리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인허가 | 6개 법령, 9개 인허가 | 1개 통합허가 |
| 배출기준 | 획일적 배출기준 | 사업장별 맞춤형 기준 |
| 이행점검 | 일회성·단속성 점검 | 주기적·상담형 진단 |

※ 제도 도입시 행정비용 절감(10년간 655억원), 환경설비 투자증대(연 3,300억원) 등 기대

- 소각, 발전, 석유화학, 반도체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전과정(허가신청~결정)을 시범적용('14.11~'15.11)

□ 네거티브형 재활용제도 도입

- 환경위해가 없는 한 재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규제로 전환하여 재활용(특히 고갈성 폐자원)을 극대화(폐기물관리법 개정, '15.6)
 - * 신기술 인정 소요시간 최소 2년 → 최대 6개월로 단축
- 성·복토재, 채움재 등 토양·지하수와 접촉하는 재활용을 대상으로 환경위해성검토 시범사업 추진('15.3~7), 가이드라인 개발('15.10)
- 폐기물 분류체계를 업종(대분류), 발생공정(중분류), 폐기물종류(소분류)에 따라 국제 수준으로 세분화·표준화하여 재활용 확대
 - * (폐기물종류) 국내 148종 ↔ EU 839종, 미국 1,214종

□ 국토·환경계획 연동제 가동(국정과제 96-1)

- 관련 법제(환경정책기본법, 국토기본법)를 정비(개정안 국회제출, '14.12)하고, 계획간 연계 범위, 방법 등을 담은 환경부-국토부 공동지침 제정·시행('15.9)
- 환경정보와 국토공간정보의 호환성을 향상하고,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(축척 1:25,000→1:5,000, 12개소)

2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

1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

2020년 이후 '온실가스 감축목표(INDC)' UN 제출

- 산업계 영향 등 국내실정,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에 부합하도록 **감축목표(INDC)**를 설정, UN에 제출

* 제20차 기후변화총회(COP20) 결정문에서 각국은 감축목표가 형평성에 부합하고 야심찬 수준임(fair and ambitious)을 근거를 들어 설명할 것을 요청



* EU·미국 등 선진국은 '15.3월까지, 중국·멕시코 등은 늦어도 6월경 제출 전망

배출권거래제의 조기 안정화(국정과제 92-1)

- 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소통 강화
 -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금융지원하여 절감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회수, 시장안정화 물량으로 활용('15년 시범사업 추진, 20억원)
 -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, 거래방법·시장분석 등 역량강화
 - 산업계·시민단체·전문가·언론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으로 소통을 강화('15.3)
- 거래·가격변동 상황 모니터링, 정기적 가격분석, 부당거래 감시 기능을 하는 전담기구를 구성·운영('15.2), 거래시장 운영 안정화를 지원
- 참여업체의 감축 유연성 확보 및 북한지역 온실가스 감축유도
 -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(상쇄) 운영, 북한 지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및 CDM(청정개발체제) 등록 지원

□ 저탄소차 시대 본격진입 촉진

○ 전기차 보급확대(3천대) 및 충전시설 이용편의 제고

- 보급차종·유형 다변화(전기택시, 전기화물차, 전기버스 등) 및 보급물량 확대('14, 800대 → '15, 3,000대)
- 고속도로, 주요도시에 **공공충전인프라 확충**으로 전국 운행기반 마련, 기 설치된 충전시설을 복합멀티형*으로 개선하여 호환성 제고

* 복합멀티형 : DC차데모, AC 3상, DC 콤보 차량 충전가능

○ 저탄소 '하이브리드차' 보급 활성화

- 하이브리드차(CO₂ 97g/km이하) 구매시 **100만원 직접 보조**(3만대) 및 최대 310만원 세금 경감으로 수요 창출
- '16년부터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(PHEV)* 보급기준(대상차종 선정기준, 보조금 규모 등)을 마련

* PHEV(Plug-in Hybrid Electric Vehicle) : 외부 전원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일정구간(약 30~50km) 운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차

□ 친환경제품 생산·유통·소비 확대

○ 친환경인증 제품 확산

-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환경마크 및 저탄소인증제품(이산화탄소 제로제품 등)을 지속적으로 확대('14, 13,617 → '15, 15,000개)

○ 친환경제품 구매 인센티브 강화

- 환경마크 제품 및 저탄소제품 구입시 그린카드(930만좌 발급) 포인트 지급비율 인상(평균 14%)

□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

○ 범국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

- 참여단체 등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, 에너지 절약 등 **40가지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수칙**에 대한 실천 캠페인 전개(연 약 1천회)

○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줄이기 4대 중점과제(교통, 냉난방, 전기, 자원)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

【2】 새로운 환경가치 창출

□ 맞춤형 환경산업으로 해외시장 개척

○ 급성장 중인 중국 환경시장 진출지원

- 중국 3~5개 제철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* 본격 추진

* 韓 200억원 등 총 2,000억원 규모('14.7 한중 정상회담 합의)



○ 9대 유망 환경기술*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중국의 환경개선 수요가 많은 10개 성·시(省市)** 진출 지원(산업부·중기청 협업)

* (9대 유망 환경기술) ①집진, ②탈질, ③자동차 매연저감, ④멤브레인, ⑤생활폐기물 처리, ⑥건설폐기물처리, ⑦토양복원, ⑧신재생에너지, ⑨에너지저장시스템(ESS)

** (10개 성·시) ①북경시, ②하북성, ③상해시, ④광둥성, ⑤요녕성, ⑥산둥성, ⑦섬서성, ⑧사천성, ⑨절강성, ⑩호북성

○ 물산업 허브(Hub)가 될 '물산업 클러스터'(대구) 조성 착수

- 물융합 연구동, 비즈니스센터, 실증화 단지 등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전주기 지원시설 구축 추진

* 기업, 연구소, 공공기관 등의 집적화로 200개 강소기업 육성

- 세계 물포럼 개최('15.4, 대구·경북)를 계기로 아시아·태평양 물산업협력 (한·중·싱 등) 양해각서 체결, 해외 성공사례 공유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

□ 폐자원·에너지의 순환이용(국정과제 92-4, 98-1)

○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('15.8)하고, 업계, 자치단체, 전문가가 참여하는 '자원순환협의체'를 운영하여 세부제도 구체화

* 순환자원인정제 도입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여 1.7조 원, 일자리 1만개 창출 기대

○ 폐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기 준공(홍천, '16.9→ '15.12)해 성공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('15년 3개 타운 추가조성)

□ 생태계 보호지역 및 야생생물 보호·복원 확대(국정과제 93-2)

○ 국제사회 요구기준으로 보호지역 확대

- 지정기준 보완, 국민인식 조사 등을 통해 국립공원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새로운 유형*과 지역을 발굴('15.10)

* 공원 유형(예시) : ① 산악형, ② 해상·해안형, ③ 사적형, ④ 갯벌형, ⑤ 하천형

- 보호지역 개념 확립, Aichi Target11* 이행계획 등 효율적 '보호지역 확대 로드맵' 마련('15.12)

*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육상은 17%, 연안·해양지역은 10%를 보전 권고(UN)

○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·복원 및 교란종 퇴치

- 대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(산양, 반달가슴곰, 여우 등 43종) 복원사업 내실화

* 반달가슴곰 복원지역 확대('17), 따오기 우포늪 방사('17)를 위한 서식지 조사·정비

- 외래종 24종에 대해 생태계위해성을 심사하여 필요시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하고, 낙동강·남한강수계에서 뉴트리아를 집중퇴치(4천마리)

○ 동물 사육환경 개선과 야생생물 보호방안 마련

- 동물원 등에서 사육·전시 중인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(환경부, 해수부, 산림청 등 4개부처) 공동으로 법률 제정 추진('15.12)

-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처 보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「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('16~'20)」 수립('15.12)

□ 생태관광 집중 육성 및 확산

○ 생태관광 성공모델별 차별화된 지원 및 육성 추진

- ① 제주 선홍 1리 : 친환경 숙소조성 등 국제기준 유형
- ② 영산도 : 도서지역형 생태관광 대표유형
- ③ 인제 용늪 : 용늪 탐방시설 보완 등 보호와 이용의 조화 유형
- ④ 고창 용계마을 : 생태·문화 결합마을 비즈니스 유형



○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

- 관계기관(환경청, 지자체, 교육청 등)간 협업을 기반으로 국립공원 및 생태관광지역(17개소)으로의 “생태수학여행”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지원
- 국제 식물의 날 연계 ‘우리동네 야생화 찾기’ 행사(‘15.5),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등 ‘韓國의 美’ 야생화 보급 사업 추진

□ 생물주권 확보 및 생물자원 활용기반 강화

○ ‘14.10월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 및 지원체계 구축

- 「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
- 바이오, 의약 등 산업계 인식제고, 맞춤형 컨설팅 확대 운영(30개 기업)

○ 치료제·환경정화 등 유용 생물자원 발굴 본격착수

- 자생생물의 유용성·특성정보를 분석하고 기술·정보를 제공하여 제약, 식품 등 업계의 생물자원시장 진출 지원(‘15, 4개 분야)

| 감기약 치료제 (뽕순나무) | 말라리아 치료제 (전통지식 활용) | 발효 미생물자원 (전통 누룩) | 폐수처리 미생물 (버섯균주)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

- 생물자원 1,250종을 신규 조사·발굴(‘14, 42,733종 → ‘15, 43,983종)

【3】 환경과 기업, 모두 웃는 환경규제 개혁

□ 환경오염시설 입지규제 합리화

○ 오염배출 산업시설 제한지역 재정비

- 위해성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을 규제(먹는물수준 이상)하던 방식에서 영향이 없거나 적은 업종을 환경 안전조치 하에 **입지 허용**하는 방식으로 전환
 - ※ 규제가 제외되는 업종은 허가단계에서 최적가용기법 등의 적용을 면밀 검토
- 20~30년 전 지정된 환경오염시설 제한지역의 **실효성 원천 검토**
- 기술진보, 환경인프라 확충 상황을 반영하고 국민의 인식변화 고려

□ 불합리 규제 철폐

○ 대국민 접점인 지자체에 위임·이양된 규제(7,000여개) 일제점검·정비

- 환경분야 조례·규칙 전수조사, 환경기술인협회 등 직능단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최대한 발굴·정비

○ 거추장스러운 자료제출, 보고의무 등 일괄정비

- 실효성·필요성은 적으면서도 기업에 부담만 주는 자료제출, 보고의무 등 규제에 대한 합리화·최소화 추진
 - ※ '14년 규제신문고, 기업애로과제 등을 통해 해소된 생활 속 불편·불만사례 중 행정조사 관련 내용이 17%를 차지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

□ '환경 규제지수제' 도입으로 규제품질의 향상

- 등록규제별 유형(입지·영업 등), 강도(금지·허가·신고 등) 등에 따라 지수(指數)를 부여하여 규제 지수의 총량 및 변화를 관리
- 규제의 신설·강화, 기존규제 감축 및 질적 개선 등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



환경약속4

온실가스는 줄이고,
친환경 소비를 늘리겠습니다



온실가스 감축 내실화

| 2020년 이후
온실가스 감축목표
(INDC) 수립,
UN 제출



| 배출권거래제 시행,
조기 안정화 추진

- *상세 조감속 등
참여업체 감축
유연성 확보
- *감축세비 재정지원



친환경 소비문화 확산

| 저탄소자 시대
본격 진입 촉진

- *전기차(3천대),
하이브리드차(3만대) 보급
- *고속도로, 주요도시
공공 충전인프라 확충



| 친환경상품
소비자변 확대

- *저탄소 인증제품 확산
(CO₂ 350만톤 저감목표)
- *친환경제품 구매 그린카드
포인트 인센티브(14%)



|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
범국민운동 전개



환경약속5

환경 가치를 높여
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



환경산업 육성

| 맞춤형 환경산업으로
해외시장 개척

- *중 3-5개 제철소,
대기업지정
공동사업 추진



| 대구 '물산업 클러스터'
조성 착수

- *세계 물시장규모
5,688억 달러



폐자원·에너지의 순환 이용

| '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'
제정, 재활용시장 활성화

- *순환자원 인증제,
자원순환 목표 관리제 도입
- *1.7조원, 1만개 일자리 기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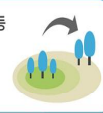
| 폐기물이 돈 벌어주는
친환경에너지타운 확대

- *3개소 추가 지정



생태계 건강성 제고

| 국립공원, 습지 등
생태보호지역
지정 확대



|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
(산양·여우 등 43종) 및
생태교란종 퇴치



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

| 지역 생태관광
성공모델 육성 확산

- *제주 선을 1리,
강원 인제 용늪 등



| 자생 생물자원 발굴 및
유용성물 사업화 지원



환경약속6

환경은 살리고 기업도 웃는
환경규제로 바꾸겠습니다



입지규제 합리화

| 오염배출 산업시설
제한지역 재정비

- *유해물질 발생 업종 금지
→ 환경영향 적은 업종 허용
- *공정설립제한지역내
소규모 상계형 업종
허용 확대



불합리규제 철폐

| 입지규제 전수 조사 및
과잉 규제 해소

- *7천여개 지방 환경규제
법령 불합치 불합리 관행
여부 심사(3월)



| 거주장소권 자료제출,
보고의무 등 일괄 정비

- *56개 환경법령에 따른
1100여개 현수조시



현 시대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증진하는
환경을 만들겠습니다.

mev 환경부



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